개혁 '98 : 화학경영을 혁신하자!

“ Mitsui투자방식은 불가하다! ”

4대 재벌간의 Big Deal이 부실경영 및 문어발식 사업확장에 대한 책임소재를 전혀 간과하고, 국민세금 및 금융권에 대한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및 금융권의 후속 특혜조치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7개 부문 Big Deal 중에서도 석유화학 부문의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의 통합은 6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때문에 회생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특혜적 조치들이 요구되거나, 특혜조치가 강구되고 있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비아냥거리가 되고 있을 정도이다.

특히, 현대와 삼성은 Big Deal의 조건으로 가당치도 않은 많은 특혜조치를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 Mitsui를 끌어들여 국가경제를 거덜내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을 일본에 예속화시킬 수도 있는 어마어마한 흉계를 꾸미고 있다고 들린다.

전경련을 내세워 현대와 삼성이 요구하고 있는 조건은 특혜를 넘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음은 모두가 다 인식하고 있는 문제이다. 대표적인 것이 구조조정기업의 부채비율을 200%이내로 유지할 수 있도록 부채 일부를 우선주 형태로 출자전환하고, 출자전환지분은 외국자본을 유치해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 · 매각해 그 매각대금을 우선적으로 은행에 상환하겠다는 요구조건이다.

현대와 삼성이 부채비율 200%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부채 5조8130억원 중 2조6000억-2조7000억원을 우선주 형태로 출자전환하고, 외국자본을 유치한 이후 출자전환지분을 다시 보통주로 전환해 매각하며, 지분 매각대금을 가지고 금융부채를 상환하겠다고 나선 것은 일본정부의 한 · 일관계상 부담 및 Mitsui의 한국 석유화학 시장 지배전략을 교묘히 이용해 위기국면을 탈출해보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정부는 김대중대통령의 일본방문을 맞아 한국의 외환위기에 일정한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일본기업의 한국투자 또는 지원을 독려하고 있고, Mitusi는 한국의 과도한 신증설에 따라 지배력을 상실해가고 있는 아시아 석유화학 시장을 재장악하기 위해 현대 · 삼성의 합병기업에 투자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 회생 불가능한 현대 · 삼성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진 것이다.

그러나 Mitsui와 현대 · 삼성간의 상호거래 초점은 Mitsui의 직접투자가 아니라, Mitsui가 국영인 산업은행에 20억달러를 빌려주고 산업은행이 20억달러(2조6000억-2조7000억원)를 현대 · 삼성 통합 석유화학기업에 출자하는 간접투자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 향후 시황에 따라서는 중간자로서 경영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Mitsui는 위험부담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국 석유화학 시장을 장악하겠다는 것이고, 현대와 삼성그룹은 자력갱생이 거의 불가능한 석유화학기업의 지분을 유지하면서 일본자금을 빌려 경영을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이다. Mitsui의 자금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온갖 까다로운 조건과 특혜가 요구되는 것은 물론이다.

그래서 현대 · 삼성은 전경련을 앞세워 만기를 연장한 금융부채는 10년거치 일시 상환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자율은 국제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우의 쌍용자동차 인수 전례에 따라 은행권은 우대금리(Prime Rate)에, 비은행권은 우대금리+1%를 적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또 채권금융기관은 사업구조조정 대상법인 및 사업과 관련해 기존 계열사가 이미 보증한 상호지급보증을 일시에 해소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제 및 법적 · 정책적 지원 요구는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마디로 한국 1-2위 재벌들이 요구하고 있는 Big Deal의 전제조건은 그들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은 물론,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가도 팔아먹을 수 있다는 「한국재벌」의 속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어느 재벌 소유주도 정상기업은 물론이고 부실기업에 대해서도 포기할 마음이 전혀 없으며, 절대 그러하지 않을 것』이라는 석유화학 관계자의 소회는 국내 재벌들의 행태로 볼 때 의도적 왜곡이 아니라 정설로 보아야 할 것이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특혜적 지원은 당장 그만 두어야 할 것이다.

<화학저널 1998/10/12>